

지붕 위 작업 무법지대…노동자 목숨 앓아간다

2m 이상 안전장치 설치 의무 안 지켜…올해 영암에서만 4명 추락사
안전벨트 2~7만원·추락방지망 20만원인데 사업주 장비 지급 외면
고용부 근로감독·점검도 뒷북…법 경시하는 산업현장 경각심 필요

작업 현장 내 추락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띠를 갖추려는 사업주나 노동자들의 인식이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법상 반드시 갖춰야 할 의무 사항인데도, 현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이 정도 높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작 3만원이면 갖추 수 있는 안전대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목숨을 걸고 높은 지붕 위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만 추락사 4건…추락방지시설·장치 ‘전무’=11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

면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영암지역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는 모두 4건이다. 이들은 안전띠·추락방지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지난 7일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공장에서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딛고 있던 채광창(선라이트)이 깨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지난 4월 16일에도 대불산단에서 태양광 패널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20m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고 지난 1월 17일에는 대불산단 내 공장 지붕에서 환풍기를 옮기던 40대 노동자가 환기창이 무너지면서 13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튿날인

18일에도 영암단에서 지붕개량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채광창이 부서지며 4.5m아래로 추락했다.
박영민 노동사도 “올해만 영암에서 추락사고로 4명이 숨졌다.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목숨 위협하는데 비용 문제로 ‘머뭇’=경찰과 노동당국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안전대를 갖춘 채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 38조)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m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현장 노동자들 전언이다. 방지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인건비를 투입해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설치 시간 등을 고려해 외면 받는다는 것이다.
영암에서 지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단층 짜리 작업하는 경우 높이가 4m정도인데, 그렇게 높은 작업이 아니다”면서 “안전망 설치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아예 법 규정조차 모르고 높이 않아 괜찮다는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른 업체 관계자 B씨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데, 모든 현장 전체에 설치를 하기 힘든 곳도 있고 별도 비용을 들여 설치 인력을 투입해야 해 솔직히 부담된다”고 했다.
추락방지망의 경우 건축물을 둘러싸며 설치해야 하는데, 벽면에서 3m 이상 구성하려면 최소 20만원(4m x 50m) 수준이 들어간다. 건물 크기가 클수록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안전대 착용도 소극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제 45조)은 ‘사업주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벨트)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안전벨트는 재질·착용 형태 등에 따라 2만~7만원 수준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등도 의무사항인데, 현장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노동청의 소극적 근로감독도 문제로 꼽힌다. 부족한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다를 이유로 사고가 난 뒤에야 점검이 이뤄지는 구조 때문에 적극적인 현장 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미비한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함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지난 8일 “사업주는 ‘안전관리 비용 절감’을 명분삼아 위험시설 투자와 예방조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안전사고 온상’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국토부, 9월 30일까지 50일간

정부가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11일부터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50일간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나섰다.
당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한 현장, 그리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의심 현장과 건설산업정보망(건설산업정보원)과 40개 관계기관이 운영하는 정보망을 연계해 불법하도급 의심업체를 추출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하도급은 건설업계에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안전사고와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지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

尹 4회 연속 불출석에…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는(서울구치소의) 보고서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지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적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역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

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 검토를 촉구해달라”고 재차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지(대상자를 데려와 놓는 것)하는 경우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며 “형소법 규정에 의해 인지가 현저히 곤란할 때는 궐석 재판하도록 돼 있다.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내란특검팀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또 김건희특검팀은 조사를 위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당사자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무산됐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폭발물 테러 협박 신고가 접수된 광주 동구 롯데백화점에서 군·경의 폭발물 수색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 롯데백화점 폭발물 발견 안돼

일본 변호사 사칭 폭파 협박에 직원 대피도…경찰 수색 종료

경찰이 광주지역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1일 광주 동부·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112에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동구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경찰특공대 등을 각각 투입해 수색을 벌

였지만 폭발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화점이 개장하기 전 신고가 접수돼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으나, 일부 직원이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25분께 수색을 종료하고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은 정상 영업했다.
폭파 협박 메시지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 팩스로 처음 접수됐고 인권위가 서울 마

포경찰서에 신고하면서 광주지역 관할서에도 통보됐다.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팩스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기승을 부린 일본발(發) 추정 협박 메일·팩스와 유사한 형태라는 게 경찰 분석이다.
전날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 지난 8일 학생 대상 ‘황산 테러’ 협박 팩스 등도 모두 일본 변호사 명의였다. 모두 동일법에 의한 소행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